

투데이 칼럼

현대전 필수 무기 '드론'

정복규
논설위원

최근 한미가 북한의 장사정 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력 전 훈련에 나섰다. 과학화 전투훈련 장비를 활용한 국제 전투 경연대회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다. 이 훈련에서 눈에 띄었던 건 드론이다.

이제 드론과 무인기는 현대전에서 없어선 안 될 핵심 무기다. 방어하기 까다로운 비대칭 전략으로 평가 된다. 미스터리 드론은 당시나날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한미 훈련에서도 미군의 킬러 드론 '그레이' 이글이 활약하였다.

소형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그레이 이글'은, 알카에나, B 등 중동 테러 조직 지도부 암살에 투입 됐다. 러시아군은 이란에 사해드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제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 탱크의 침공을 저지 했다. 드론 최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도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가자지구를 훨씬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상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장악한 중국산 제품은 북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드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금지 품목이다. 북한이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제 드론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경우 약 30kg의 C4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폭발력은 TNT 40.2kg으로 1989년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데 바른 베이루트 차량 폭탄 테러와 비슷하다.

북한이 중동에서 들여와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드론은 약 40kg의 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미군의 지하 벙커 폭발을 폭탄인 벙커 버스터 2개의 파괴력과 비슷하다.

지난 9월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 주지사로부터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를 선물로 받았다. 자폭 드론은 실제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공격한 모델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를 북체해 대량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그동안 무인기 도발을 거듭해 온 데다, 드론을 이용한 공중침투 위협도 높아졌다. 우리 군은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을 기습 침투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북한은 한층 더 위협적인 무인공격기를 공개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군에 무인기 종대를 편성해 개발과 함께 운용 인력을 양성해왔다. 열병식 등을 통해 형태만 알 수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실체가 파악된 건 2014년이다. 백령도와 평원 등에서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부터다. 이 때만 해도 수도권단 정탐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3년 뒤에는 결국 성주까지 비행할 정도로 발전했다.

이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이르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대부분 무인기로 사용된다. 무선 조종에 의한 무인 비행기 혹은 선박, 미사일에서 많이 쓰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젤렌스키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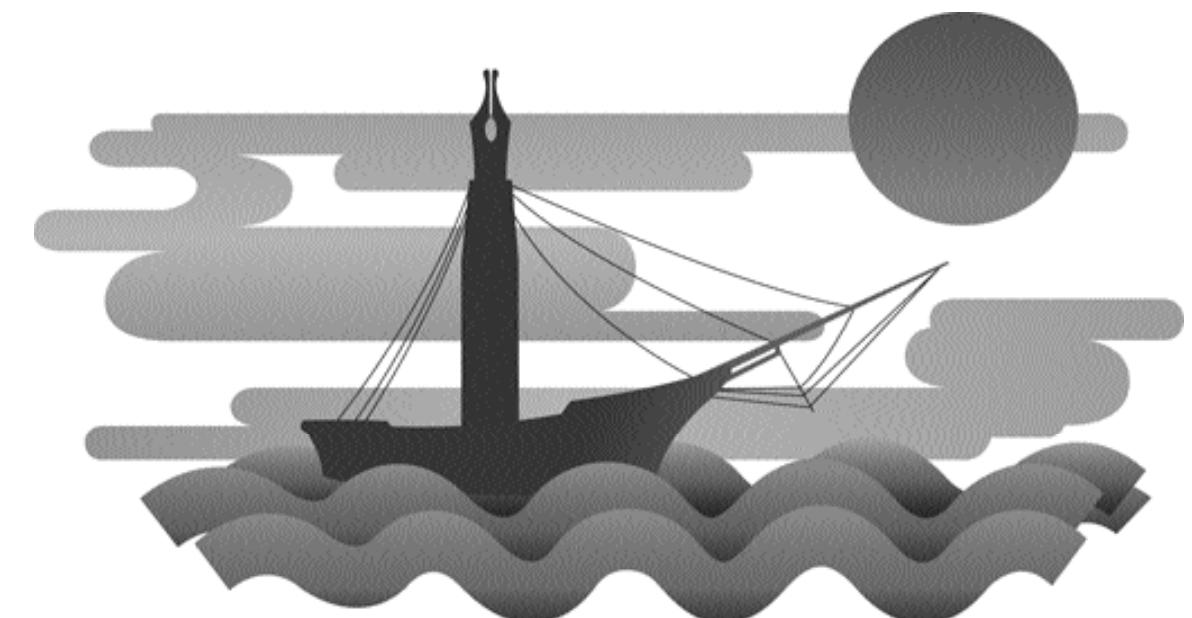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하르키우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여름 반격이 무기와 지상군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거울이 딱히 있어서 러시아와의 전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밝혔다.

트리 점등 후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 타워 잔디 광장 '엘립스'에서 내셔널 크리스마스트리에 점등한 후 부인 Jill Biden 여사 옆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실태

이주 노동자 체불 임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월평균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13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이주 노동자도 대지급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1~7월 체불임금액은 7614억 원(신고건수 6862 건)이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체불임금액 중 이주 노동자 피해 비중은 7.8%다. 이주 노동자 체불임금 액은 2018년 972억 원에서 2019년 1217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1288억 원, 2021년 1184억 원, 2022년 1223억 원으로 좀처럼 즐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액은 1086억 원으로 전체의 89% 수준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의 신설이 절실히다.

임금체권보장법은 산재보험 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산재보험법 시행령만 손질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단법인 어울림의 이웃사랑

사단법인 어울림의 2023년 어울림 사랑의 김강김자 나눔 봉사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평화동 2가 520-1에서 열렸다. 전북은행 후원으로 함께 열린 이날 봉사에는 사단법인 어울림 회원 등 봉사자 80여명이 참가했다.

자선단체 회원들과 사단법인 어울림 봉사원들은 올 여름, 그리고 가을부터 친환경 무농약으로 길러온 양념으로 배추를 구입하여 조리했다. 그리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시설 등 300세대에 전달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어울림은 총 회원 수가 128명이다. 2023년에는 월 1회씩 반찬 봉사, 떡국 봉사, 년 1회, 이미용 목욕과 청소 봉사, 년 1회, 장애인 단체 무료급식 지원 월 1회, 평화동 경로당 어르신 삼계탕 봉사, 년 2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빨래 봉사, 년 3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